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원지역회의 제17기 출범식 및 확대운영위원회가 23일 도청에서 열려 박용성 신임 부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권태명기자

## 통일준비 미룰수 없는 시대의 사명

### 제17기 민주평통 출범식

제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원지역회의(부의장·박용성)가 23일 도청 산관 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날 출범식에는 박용성 부의장, 김정삼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시·군협의회장, 분과위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출범행사 후 지역회의 활동과 자체 안전 등에 대해 토

의했다. 박용성 부의장은 취임사에서 “통일 준비는 한시도 미룰수 없는 시대의 사명”이라면서 “자문위원들과 통일 정책을 공유하고 도민들의 통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17기 민주평통 강원지역회의는 앞으로 임기 2년간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통일을 위한 정책 건의와 자문을 담당한다.

정윤호기자 jyh89@kwnews.co.kr

## “주민 통일 인식개선 계기 만들 것”

### 박용성 강원부의장

박용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원부의장(사진)은 23일 출범식에 앞서 “부의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도민들이 정부의 통일 정책을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부의장은 이어 “다가올 통일 조국에서는 도민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전 국민의 통일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하반기 계획된 통일포럼, 청



소년 교육 등이 도민들의 통일 인식을 개선·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곧 통일의 밑

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 부의장은 이어 “통일은 강원도의 새로운 도약과 성장의 발판”이라며 “정부에서 추진 중인 남북 협력사업은 접경지역이 많은 강원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고 이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윤호기자 jyh89@

### 프로필

#### 김명선 도기획조정실장



김명선(50) 도기획조정실장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와 강원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그동안 쌓은 경험과 역량을 쏟아부으겠다”고 약속. 양양출신. 양양고, 성균관대, 서울대 대학원을 졸업. 행정고시(36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경기도 외자 유치팀장, 수원시 권선구청장, 안전행정부 주민과장, 행정자치부 지역발전과장 등을 역임. 가족은 부인 정은용씨와 1남.

# 올림픽 '빅에어' 평창 개최

<Big Air>

경기 장소 개폐회식장·스키점프대 일원 유력  
IOC·평창 조직위 지휘부 회의 열고 의견 조율

## 5차 IOC 프로젝트 리뷰

평창동계올림픽에 처음 도입되는 빅에어(Big Air) 경기가 메인 개최도시 평창일원에서 열릴 전망이다.

23일 평창에서 제5차 IOC 프로젝트 리뷰가 열린 가운데 구닐라 린드버그 조정위원장과 조양호 위원장 등이 배석한 지휘부 회의에서 빅에어(Big Air) 경기장 문제를 논의, 평창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위는 빅에어의 높은 인기나 흥행성 등

을 감안, 서울 개최를 유력하게 검토해 왔다. 그러나 이날 회의를 통해 빅에어 개최지는 평창으로 결정됐으며 개최 장소는 개폐회식장이나 스키점프대 일원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날 진부면 컨스턴 플라호텔에서 열린 5번째 평창 프로젝트 리뷰에서 IOC는 평창올림픽의 분야별 준비 상황을 실무적으로 점검하고, 도와 조직위가 IOC의 자문의견을 들었다.

린드버그 조정위원장은 테스트이벤트 프로그램 구성과 대회이전 운영, 계

획 수립에 필요한 거버넌스(협치) 모델 구축, 개최도시 유산 문제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분야 회의에 배석해 현안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측은 개폐회식장과 관련한 평창 조직위와의 논의에서 건설 진행상황에 대해 물었고, 이에 조직위는 수의계약으로 추진중이며 현재 설계를 진행중이라고 답변했다. 또 올림픽플라자 내에 들어서게 될 메달플라자와 올림픽플라자간 명칭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IOC측의 의견도 개진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워킹그룹별로 개최도시 개발과 재정, 전문가 채용 필요성 등 인력 관리, 방송중계 기술 등 각 분야별 준비

상황을 발표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5차 프로젝트 리뷰에는 IOC에서 린드버그 조정위원장과 크리스토프 두비 수석국장 등 부서장이, 조직위에서는 조양호 위원장 등 간부들이 대거 참석했다.

최문순 지사도 IOC-POCOG(국제올림픽위원회-평창조직위) 통합협의체 회의에 배석, IOC와 조직위에 강원도의 준비 상황을 설명했다. 프로젝트 리뷰는 24일 정선알파인 스키장과 보광,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 올림픽플라자, 진부역을 방문하는 베뉴투어와 마무리 회의를 할 후 끝난다.

서울/진민수·김여진

▶ 관련사진 2면

## 김명선 도 기조실장 취임 김성호 전 실장 미국 파견

김명선(50·부이사관) 신임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이 24일 취임한다.

김성호 기조실장 후임으로 발령받은 김 실장은 양양출신으로 양양고와 성균관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행정학)과 KDI 국제대학원(경영학) 석사.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 수원시 권선구청장과 경기도청 정책기획관, 비전기획관 등을 거쳐 안전행정부 주민과장과 행정자치부 지역발전과장을 역임했다.

한편 김성호 전 기획조정실장은 내달 초 미국 캔자스시티로 파견근무를 떠난다.

백은인 105in@kado.net

강원경제 건설업이 이끈다 <3> 분할발주가 해법

## 영세업체 "진입장벽 낮춰야"

지방계약법 확대 등 제도적 보호장치 필요

건설산업을 강원경기 부양책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

건설투자 위축은 내수 부진과 고용악화로 이어져 강원경제 전체를 파탄으로 몰고 갈 수 있다. 이 때문에 건설투자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도내 건설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업체들의 영세성이다.

강원발전연구원에 따르면 도내 건설업체 중 상시 종업원이 4명 이하인 영세업체가 52.6%에 달한다.

도내는 물론 전국 규모의 건설활동에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 대목이다.

공공부문 의존도가 높다는 것도 문제다. 전국 평균 공공부문 의존도는 43.7%인 반면, 강원 건설의 경우 68.1%다. 공공기관 발주 물량은 정책 방향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공급과 수요가 불안정하다.

최저낙찰가제 등 제도적 장치도 영세한 도내 건설업체에 불리하다.

최저낙찰가제는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평창 동계올림픽 같은 대형 공사에는 대형 건설사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해 지방계약법 적용 확대 등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도로의 구간이나 건축동별 등 분할 발주가 가능한 공사를 확대해 지역 업체들의 공사 수수율을 높여야 한다.

하청업체 위주인 전문건설업체 보호책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민간건설공사인 허가시 지역업체와 하도급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를 비롯한 시군 담당 공무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페이퍼 컴퍼니'와 '철새업체' 등 소재지 변동신고로 진입되는 업체들의 등록기준을 수시로 확인, 미달업체는 퇴출시키는 등 강력한 페널티도 필요하다.

노승만 강원발전연구원 기획경영본부장은 "최근 들어 공사 규모가 대형화 되고 있어 영세한 도내 업체들이 수주에 불리하다"며 "강원도를 비롯해 도내 18개 시군과 지역 공공기관들이 도내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안정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안은복 rio@kado.net



오인철 신임 강원도회장은 요즘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판이다. 지난달 말 제21대 강원도회 수장으로 취임한 이후 주요 발주기관 등을 찾아다니며 지역업체 및 회원사들의 권익 보호와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발벗고 뛰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만나 도내 건설산업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임기 동안 지역업체 공사물량 확보와 수익성 증대에 ‘올인’하겠다”는 공약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 “도와 평창올림픽 토목공사 분할 발주 협의 낮은 단가 등 軍공사 애로 해결에도 힘쓸 것”

### 늦었지만 취임 소감은.

경기침체로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도회장직을 맡게 되어 책임감이 크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위기극복을 위한 사업 추진과 회원사 권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앞으로 3년간 도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공공공사 의존율이 높은 강원 건설산업 특성상 물량 감소는 체감경기 하락으로 직결된다. 이에 따라 장·단기적으로 ‘공사물량 확보’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사 수익성 개선을 위한 원가 내역 현실화에도 속도를 내겠다. 내부적으로는 도회에서 추진하는 기존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재검토해 개편·강화하는 한편 대회원 서비스 품질을 대폭 높여 회원 중심의 협회 운영을 전개할 계획이다.

###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은.

앞서 언급했듯 지역업체 공사물량 확보와 공사 수익성 개선이다. 이를 위해 발주기관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전국 발주 규모의 대형 공사 사업을 최대한 분할발주로 유도해 지역업체 지분을 확보해 나가겠다. 표준시장단가 제도의 현실단가 반영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본회와 긴밀히 공조하고, 일부 발주기관들의 예산 절감 명목의 원가 삭감이나 제경비를 축소 등 불공정 행위에도 강력히 대응해 회원사의 재산성을 제고하겠다.

평창동계올림픽 특수에 비해 지역업체들이 피부로 느끼는 수주량 증가나 경기활성화 수준은 낮은 것 같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면,

동계올림픽 시설공사의 경우 특별법에 따른

우대 기준이나 지방계약법을 통해 지역업체 참여를 지원하고 있지만, 대부분 대형 공사이다 보니 지역에서도 일부 업체에만 과급효과가 국한되는 것이 문제다. 아직 발주가 남아 있는 접근도로 등과 같은 토목공사의 경우 공구 분할 등을 통해 분할발주가 가능한 만큼 강원도와 긴밀히 협의해 소규모 지역업체까지 참여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

지역 특성상 군 공사가 많다. 그러나 이 역시 낮은 수익률이 문제인데.

최근 공사집행을 담당하는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과 협력을 강화해 문제점이 차츰 개선되고 있긴 하나, 여전히 회원사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도회는 지난해부터 회원사 현장별 대응체계를 구축해 비현실적 단가나 부당 요구 사항 등에 대한 민원을 상시 접수하고 있다. 협회 차원의 건의 창구를 마련해 활동을 펼치고 있는 만큼 기능을 더욱 강화해 회원 고충을 털어내겠다.

### 회원들과의 소통 방안은.

강원도는 인구에 비해 넓은 지리적 특성상 지역 간 견해 차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는 소통과 배려의 부족이 큰 원인인 만큼 협회 운영에 있어서도 회원사 간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각종 협회 사업 시행 시 투명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모두가 함께하는 참여 중심의 운영을 펴나가겠다. 시·군별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협의회 기능을 강화하고 교류를 확대해 단합된 힘을 모을 계획이다. 작지만 강한 강원도의 힘을 보여주고 싶다.

정희훈기자

원가 내역 현실화 속도내고  
도회 추진 사업 개편·강화  
회원 중심으로 협회 운영